

제101회 KISTEP 수요포럼

주 제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 국내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를 중심으로
담당자 : 이새롬 연구원(T. 02-589-2786)

포럼 종합 요약

2019. 3. 27

1.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던 고도성장기, 정치의 가치가 지배하던 민주화 시기를 거쳐, 이제 한국은 사회적 가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이와 관련 자본주의 패러다임 역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
-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블루오션 시프트’의 접근과 일치하며, 사회문제와 사회적 가치는 기업에게 사회공헌의 관점이 아닌, 전략적 비즈니스모델 개발의 관점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음
 - 소셜벤처는 작은 규모, 작은 범위에서 사회문제 기반의 비즈니스모델을 탐색하는 ‘선행지표’(a precursor)로서 대기업에게 영감을 제공
- 소셜벤처는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목적 추구를 비즈니스의 혁신과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의 가능하며, 비영리형 사회적기업과는 구분됨
 - 소셜벤처가 공략하는 사회문제는 통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와 연동되어 건강, 환경, 에너지, 혁신 등 다양한 아젠다와 관련됨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 전문가들과 함께, 모호했던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시하여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두 부분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소셜벤처로 판별
 - 해당 소셜벤처 판별을 획득한 경우, 해당 소셜벤처는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자금에도 연결 가능
- 소셜벤처 비즈니스모델은 통상 9가지 원형(Alter 모델)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이 지원 모델, 시장 중개 모델, 고용 모델, 유료 서비스 모델, 시장

연계 모델 등이 포함

- 최근의 소셜벤처는 위의 9가지 원형 외에도 복합형 또는 기술혁신 스타트업과 점차 비슷해지며, 기존 스타트업과 유사해지는 경향
- 현재 국내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임팩트투자 기관에는 D3주빌리,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MYSC, HGI, 옐로우독, 쿨리지코너 등 10여개 투자사가 존재
- 자체 자본(본계정) 투자에서 벗어나 2018년부터 정부출자를 통한 임팩트 투자 펀드가 활발해지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총 1,080억 원이 11개 운용사를 통해 결성되었거나 결성 중에 있음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시사점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벤치마킹하여,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형 TIPS 프로그램의 운용도 가능
- 민간투자자가 투자한 곳에, 기술이전, 기술개발 지원금을 매칭하며,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형 소셜벤처 pool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사업 오픈도 가능(2019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자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시작하며, 전문 엑셀러레이터 운영기관을 모집 중)
- 한국남부발전이 공기업 최초로 2018년부터 6년간 10억을 '소셜임팩트 펀드'에 출자(LP)한 것과 같이,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 역시 임팩트 펀드 참여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
- 또한, 사회문제는 복잡계(complexity)를 가진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사고(systems thinking)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모델을 구축한 곳에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이러한 솔루션 모델은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라고 불리며, 해당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 원천기술 보유기관, R&D 실행기관, 솔루션 실행기관, 가치사슬 상 협업기관 등 다양한 유관 이해관계자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의 '어벤저스'를 구성할 시, 지원 집중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함
- 해결책 개발자들이 리빙랩 등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문제점 정의에 R&D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문제 정의와 발견을 위해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고, 이를 R&D 성과로 인식해야 함
-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은 다른 기업 지원금의 1/10 수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므로 인지 확산에 노력 필요

2. 패널토론 주요 내용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는 기업경영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조명하고, 나아가 소셜벤처와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모델의 개념과 유형, 성공사례와 성공조건, 정부 정책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음
 - 금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연간 20조 원을 초과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R&D과제는 대부분 서류상 성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논문 몇 편, 특허 몇 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조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만 해도 정책 일관성 문제 등으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임
 - 첨단·융합 기술 사업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의 구체적 개발성과 초점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적 보조금에 대한 대안으로 '프라이즈(prize·상금) 플랫폼'을 시도하는 등 공공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함
- 동그라미재단이 작년에 착수한 O-prize 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인센티브 프라이즈 모델임
 -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삼성 'Tomorrow Solution'은 더 나은 내일(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솔루션 공모전이며, 2018년에는 교육, 건강·의료, 환경·안전, 지역사회 등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 ※ 아이디어와 임팩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전문가와 삼성 임직원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실현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음

- 아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는 차세대 비영리 인재 양성에 초점이 있으며 선정된 청년들에게 비영리기관 인턴십, 200시간의 임팩트 교육, 해외 비영리기관 방문 등 글로벌 스터디 기회를 부여함
- 그러나 O-prize는 유사 사업에 비해 사전에 설계된 프라이즈 목표를 달성하는 솔루션에 대하여 비교적 큰 금액의 인센티브 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대중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1단계와 선정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설계를 구체화하여 공모하는 사회문제해결 솔루션을 구현하는 개발자를 선정하여 본 상금을 시상하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됨
- 2018년에는 미세먼지, 정보보안, 자유주제 등 3개 분야에 관하여 1단계 아이디어 공모를 완료하였음
- 다만 O-prize의 인센티브 상금 플랫폼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였으며 1단계 아이디어 공모를 마친 상태에서 2단계 솔루션 공모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2단계 솔루션의 공모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의 완료를 목표로 함
- 솔루션 공모를 위해서는 문제 분야의 현재 공공·민간 기술발전 정도 파악, 기술진보와 확산 가능성 등 분석을 기반으로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개발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지식·전문성이 접목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프라이즈 플랫폼에 대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플랫폼을 세부적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음
- 3단계가 될 선정 솔루션의 사회적 확산은 정부 부문에서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적 기업 등 기업들이 이윤동기의 비즈니스로

시행함을 전제로 하는데 후자가 바로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가 될 것임

- 물론 솔루션의 확산을 정부에 기대기보다 가급적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의하여 확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거나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사회문제와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혁신을 직접 연결하려는 시도는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음
 - 한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거나 잠재된 수요를 유발하는 역할은 비즈니스가 담당하지만 수익이 아닌 사회편익, 주주이익이 아닌 이해관계자 편익을 직접적인 목적함수로 두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주체로 사익을 추구하는 시장과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를 상정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시장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 기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문제에 대한 합리성에 기초한 계획된 대안보다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그 기회를 모색하는 주체(entrepreneur)의 역할을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는 방식이라 판단됨
- 하지만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음
 - 사회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원(편익과 비용)의 배분문제와 연계되는 것으로 이를 관장하는 메커니즘으로 기존의 시장 가격과

정부 정책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상당한 스펙트럼이 존재

- 그 중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는 일종의 선의(good will)에 기초한 투자가 핵심이 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가 다소 모호함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간의 사업연계는 정책적으로 권장되지만 실천이 더딘 영역임
 - 대기업의 사업영역과 전통적 사회적 기업의 사업영역이 잘 맞지 않음
 - 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협력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연계보다는 ‘제품/ 서비스 구매’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사업연계를 고려하는 대기업이 최근 관심을 갖는 영역은 ‘소셜벤처’이나, 소셜벤처는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영역임
 - 광의의 사회적 기업 중 정부의 인증에 부정적이고, 소유/지분 구조에서 자유로운 기업, 혹은 간병, 자활 등 전통적인 사회적기업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닌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겠음
 - 하지만 중간지원기관에서 정의하는 소셜벤처의 대부분은 기존 사회적 기업과 사업영역이 크게 다르지 않고, 시장을 재편할만큼 혁신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움
 - 특히 대기업과 사업연계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는 극소수임

- 기술기반 벤처의 경우 사회적 미션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소셜벤처 영역의 'In-group'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이런 벤처 중에는 임팩트 측면에서 잠재력이 더 큰 기업 존재
 - 임팩트를 계량화하여 기업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사업 마인드가 높은 기업가일수록 해당 임팩트와 관련 지표를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가능성 높음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

- 한국사회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함께 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정책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는 반면 정부의 독자적 문제해결 역량은 점점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국민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불 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삶의 만족도 향상 간의 괴리가 점점 증가하는 이스털린의 역설 상황에 진입
 - 한국의 경제규모는 (GDP)는 2018년 기준 세계 11위이지만, 2017년 OECD의 '삶의 만족도' 지표는 전체 35개국 중 28위, 2016-2018년 UN의 행복보고서 순위는 세계 156개국 중 54위에 그침
 - 사회변화의 폭이 확대되고 변화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시 대응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사회변화 동인으로 인해 관련된 사회문제해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등의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는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다양화, 탈중앙화 현상 등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관련 정부예산도 급증하고 있으나 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충분한 확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올해 정부예산 규모(161조원)는 정부예산 총액(469.6조원)의 34.3%에 이르며 전년 대비 증가율(11.3%)은 정부예산 총액 증가율(9.5%)를 상회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보다 정부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우리사회의 문제해결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정부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 중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8.3)'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다룰 것을 표방
-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과의 관계 또한 기존의 낙수효과뿐 아니라 분수효과를 지향하는 정책 추진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18.6)'을 통해서도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사회가 함께 40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표방

- 그러나 각론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과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 특히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되거나 비교되기 어려우며, 연계 및 활용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음

- 정부 지원·투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정부 투자 방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사회문제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소망성이 커지고 있음

- 과학기술적 해결에 대한 소망성이 큰 분야는 1) 기술 발전이 동인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 2)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풀어야하지만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 조정비용이 큰 문제, 3) 사회의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을 위해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소셜벤처의 비즈니스모델은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회 문제해결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음
-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과의 관계 또한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를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있지만, 그 결과가 소득 재분배 일변도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와 수익창출방식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함
 - 경제성장이 대기업 중심 중심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과 1인기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주체로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 사회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를 재무적 가치와 직접 연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비용을 줄이고 사회의 지속적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소비 발생을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일자리 확보 및 소득 증대,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방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기대해볼 수 있음

3. 미래 대응 제언

<최성호, 동그라미재단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수>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연구계) 무엇보다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 중시와 기업가정신 고양의 분위기·문화가 확산되어야 함
 - 특히 재무적 가치와 함께 환경적·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나가야 함
 - 정부 R&D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등 분야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 국내외의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벤치마킹을 유도해야 함
 - 사회문제 해결형 비즈니스의 사업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규제·표준 등 정책조율 강화와 함께 사회적 비즈니스 투자에 특화하는 모태 펀드 투자와 정책금융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사업화 과정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외부효과, 고용창출 등의 공익성에 상응하는 재정·조세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사회문제해결 그 자체가 공공서비스 대상이므로 정부구매에 의한 시장창출방안도 강구해야 함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현재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wicked problem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관심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정당성을 확인할 방안 역시 제시될 필요 있음

- 일반 대중이나 공공부문으로부터의 fund-raising은 개별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투자유치로 간주될 수 있으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회비용으로서 사회적 수익(return)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하지만 사회적 수익은 그 개념상 가치화(valuation)문제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public percep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가 갖는 소규모성, 지역성, 맞춤형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경제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환경과 보건, 소비자 보호 사례와 같이 외부성이 심각한 시장과 정부 간 공통영역에서 심화의 경제나 조정의 경제의 장점을 유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탐색이 필요함
- 하지만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섹터라 불리는 영역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함
- 기업의 CSR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호와 육성 지원이 필요해 보이나 그 기준은 분명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다양한 형태의 펀드 중 자발적 조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공공 부문으로부터의 기금조성의 경우 일정 부분 선택과 조정이 필요함
- 기존 기업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
-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함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

- ‘미션 혹은 동기가 얼마나 투철한가’도 중요하지만, ‘임팩트 혹은 성과가 얼마나 큰가’를 기준으로 소셜벤처를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
- 이를 위해서는 임팩트에 대한 정량 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화폐가치 측정이 가능하다면 주류 투자와 연계에 유리할 것
- 특히 화폐가치로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다면 투자 대비 임팩트를 추정하는 등 주류 투자 영역과 ‘언어’를 맞춰나갈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해결 특성과 소셜벤처 및 대기업의 사업영역의 접목이 필요하며, 관련 중간지원기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필요
- 사회문제영역과 사업영역 간의 벽을 허물고, 전통적 사회적 기업의 복지 영역을 기술기반 소셜벤처 혹은 대기업의 사업영역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대기업 및 기존 사회적기업과 신생 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 도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간지원기관이 완충역할을 해주길 기대

<이승규,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장>

-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과학기술의 핵심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적 성과를 지속가능한 사회문제해결 성과로 연결시키는 대안으로서 소셜벤처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을 이용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심화되는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여 해법을 찾아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근거로 문제 발생원인과 심화 경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
- 과학기술적 성과를 소셜벤처를 통해 제품/서비스화하는 방안은 정부개입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통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문제해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사회문제해결형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소셜벤처가 지속가능한 사회문제해결 수단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셜벤처를 통해 결과적으로 문제해결의 총량이 기존 대안에 비해 향상되어야 함
 - 즉 재무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반의 소셜벤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 즉 기존기술(또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차원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수단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해결범위 또는 정도가 확장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과 평가 방식 및 활용 방안 등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재무적 가치의 비중이 높은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 창출 비중이 높은 소셜벤처를 구분하고, 소셜벤처를 통한 문제해결이 효과적이거나 기여도가 높은 사회문제 영역을 분류하여 관련 비즈니스모델을 특화하고 정부의 역할 분담 방식과 정책적 지원방식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